



[경제종합] 삼성 초격차 가속 기술 외친 JY 3나노 양산 추진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14.32 (-28.49)	코스닥	714.38 (-32.58)
금리 (미국 3년)	3.607 (+0.086)	환율 (원/달러)	1301.8 (+4.50) (23일)

씨 마른 전세... 낮은 금리에 '상생 임대인' 확산 한계

6·21 부동산 대책, 반응은

집주인-세입자 상생은 긍정 평가 저금리에 5%내 인상은 어려울 듯 전세가물에 8월 전세난 불안 여전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확산에 한계가 있고, 전세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5% 내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부가 조속한 시

일 내에 임대차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낮은 시중 금리 등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릴 태세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릴 것을 예고한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세가격을 올려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8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



메트로미디어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개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김소형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환경공학과 푸드리서치 디렉터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2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22)'를 개최했다.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김소형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환경공학과 푸드리서치 디렉터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 등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을 위해 버팀대 대출한도를 늘렸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상생임

대인 제도 확대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혀 왔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와 분상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완화 등은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 매물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비싼 한우' 공식 깬다

반격 나서는 한우

미국산·호주산 수입 소고기에 국내 한우업계 점유율 밀려나 사육기간 단축으로 한판 승부



지난 8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 한우들이 축사를 벗어나 울해 처음으로 초지에 나와 힘차게 뛰고 있다. /농촌진흥청

한우가 수입 소고기에게 빼앗긴 시장점유율 1위 자리 탈환에 나선다. 약 30년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소고기 시장은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가 각각 7 대 3 정도의 비율로 한우가 우세했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 역전은 2000년 이후 수입 자유화와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가속화됐다. 값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면서다. 국내 한우업계에선 '한우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가격 경쟁력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 국내 한우 업계는 '고급화'라는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출하월령을 기존 18~20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면서 마블링 중심의 고급육 시장

에도전했다. 현재 국내 소고기 시장이 비싼 한우와 저렴한 수입산으로 재편된 이유다. <관련기사 4면>

이 과정에서 한우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 3000톤, 국산은 26만 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1998년 기준 한우 소비비중은 75.8%였다.

시장 점유율은 내렸지만, 소고기 고급육 시장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은 일정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면에 계속> /세종=한홍수 기자 hys@

'주52시간제', 주·월 단위 연장근로 가능

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 초과근로 '저축계좌제' 도입

앞으로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내에서의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과해 일한만큼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기존 연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도 개편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한 달(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주 단위 초과근로를 사업장에 일률적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로 적용하다 보니 납품 기일을 못 맞추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활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저축계좌에 적용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기업의 다양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은 70.3%로 여전히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적용 중이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 윤정부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 이준석은 악수 거부, 배현진은 '어깨탁'... 與 지도부 갈등 지속 /사진 뉴스1

▲ 정부, "아프간 지진 희생자·유가족 깊은 애도"
▲ 홍준표, 이준석·배현진 갈등에 "당대표·최고위원 경쟁 관계 아니냐"



▲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사진 뉴스1
▲ 원인철 합참의장 "北 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상존"